

<세션1 - 현 정부의 ESG New 로드맵>

신동원 | 한국환경연구원(KEI)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

앞으로 새로운 ESG전략에서 환경부문은 관련 규제 강화와 RE100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적 주력산업이 밀집한 동남권은 강화될 온실가스 규제와 RE100 이행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RE100 이행은 동남권 산업계의 현실적인 난관이다. 특히 조선, 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 업종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 RE100 이니셔티브가 '시간대별(24/7) 조달 정보'를 요구하는 추세로 나아가며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현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MW 초과 PPA 용량 요건을 폐지하고 ESS 저장 전력의 PPA를 허용하면서 중소기업의 RE100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24/7 조달 지원을 위해 ESS 연계 및 대규모 해상풍력 설비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중화학공업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Transition)하는 데 필요한 '전환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BNK 등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정부의 명확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수립과 대출 이자 보전(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시작될 경남 지역 10기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대규모 실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며, 폐쇄 부지에 민간이 아닌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환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동남권의 성공적인 ESG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계 조성 and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시민사회,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수소환원제철 등 업종별 R&D 지원,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잇는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정책 자금 및 ESG 컨설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은 녹색일 자리를 얻으며, 사회 전체는 국제 기준에 맞는 투명성이 증진되는 변화가 기대된다.